

2021년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2021년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정책1본부

I. 배경

1. 거시경제 지표

□ 코로나바이러스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한 2020년

-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의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며 세계 주요 국가에서 역성장을 기록함.
-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20.3.11) 이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세계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가속함.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전망시점	2019	2020 ^{e)}	2021 ^{e)}
IMF	20.10월	2.8	-4.4	5.2
(선진국)		1.7	-5.8	3.9
(신흥국)		3.7	-3.3	6.0
OECD	20. 9월	2.6	-4.5	5.0
Global Insight	20.11월	2.9	-4.3	4.6
5개 IB 평균	20.11월	3.0	-3.7	5.6

자료: 각 기관

-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의 원동력은 사라지고 무역량이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은 향후 새로운 형태(뉴노멀)의 경제 변화를 예고 있음.
- 국내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경제활동이 대폭 축소되며, 외환위기 발생 다음 해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Delta 1.0\%$, 21.1.26 한국은행 발표)을 기록함.

- 정부의 네 차례 추경 재정정책 대응을 통해 OECD 국가 중 비교적 타격이 적은 경제성장 전망($\Delta 1.1$, 20.11, OECD)을 받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3차 대유행(1월 현재 진행 중) 상황에 따라 하향 가능성은 존재함.

OECD 상위 5개국 및 주요 회원국 '20년 성장률 <단위:%>

순위	국가	성장률	순위	국가	성장률
1	한국	$\Delta 1.1$	8	미국	$\Delta 3.7$
2	노르웨이	$\Delta 1.2$	19	일본	$\Delta 5.3$
3	터키	$\Delta 1.3$	21	독일	$\Delta 5.5$
4	리투아니아	$\Delta 2.0$	32	프랑스	$\Delta 9.1$
5	아일랜드	$\Delta 3.2$	36	영국	$\Delta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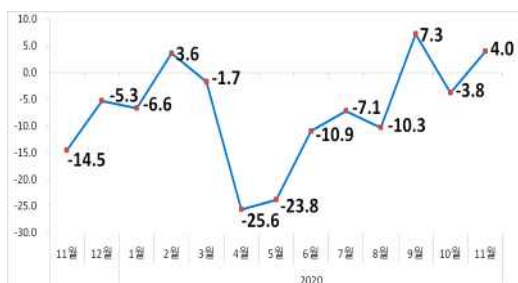
출처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2.1)

-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가 2분기부터 증가율이 2%대로 떨어졌으며,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역시 대폭 감소하면서 급속한 조정 양상
 - * 설비투자 감소는 2017년 반도체 관련 투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며, 건설투자 감소는 지방 미분양 확대에 의한 주택건설 부진과 SOC 투자감소 등에 의한 토목건설 감소가 주된 이유.
- 수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로 2분기 수출증가율이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2분기 이후부터 수출실적이 지속 개선되면서, 4분기 들어선 증가세로 전환됨.

20년 분기별 수출실적(금액은 월평균 기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34억 달러($\Delta 1.8\%$)	368억 달러($\Delta 20.3\%$)	434억 달러($\Delta 3.4\%$)	454억 달러(+0.02%)

<수출 증감률 추이 (%)>



<수출액 추이 (억 달러)>



□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2021년 경제상황

■ 세계경제

- 외국 경제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2021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따른 완만한 개선 흐름을 전망하고 있음.
-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개선 전망(트럼프 리스크 해소)에 따른 각국의 교역량이 증대로 경기 반등이 예상됨.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침체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 등에 따른 점진적인 경기 반등이 예상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기관별 2021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별	세계은행(WB)	OECD	IMF
경제성장률(%)	4.0%	4.2%	5.5%

발표 시점: 세계은행 21.1.5/ OECD 20.12.1 발표자료 / IMF 21.1.26

■ 국내경제

(코로나 회복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완만한 경기 회복 예상)

-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한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네 차례 추경(66.8조 원 규모)에 따른 기저효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가 전망한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한국판 뉴딜(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 등 정부 대응에 따른 성장을 전망함.

기관별 2021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별	정부	한국은행	OECD	IMF
경제성장률(%)	3.2%	3.0%	2.8%	3.1%

발표 시점: 정부 20.12.17/ 한국은행 20.11.26/ OECD 20.12.1 /IMF 21.1.26

(불확실한 수출 환경)

-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의 개선 여부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전개양상에 따라 이동제한조치 등이 강화될 경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상품수출¹⁾ 전망

2019		2020		2021 ^{a)}		2022 ^{b)}	
연간	상반	하반 ^{a)}	연간 ^{a)}	상반	하반	연간	연간
0.5	-2.9	-0.4	-1.6	9.3	1.9	5.3	2.3

주: 1) GDP 중 실질 재화수출

(소비자물가 1%대 상승 전망)

-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 활성화를 대비한 국제원자재가격 및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전개 상황과 공급여건, 환율 하락세 확대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돼 있음.
-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 시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20년 말 종료) 등 정부 정책 역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 정책에 따른 경제 방향)

-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약하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 경제 운용 ▲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경제구조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를 내세움.

II. 임금인상요구 근거

1.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체감물가와 다른 물가상승률 → 노동자 가구 생계비 상승

-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의 대표적인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표준생계비는 2020년 물가(3분기) 기준으로 작성됨.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0.5%로 2019년(0.4%)에 이어 최저수준을 이어감.
- 문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인데,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6.7% 상승하였음.
- 결과적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노동자 가구의 실생활 물가(농·축·수산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함.

1) 산출 결과

- 202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 가구 - 2,327,200원, 2인 가구 - 4,052,849원, 3인 가구 - 4,879,230원, 4인 가구(I) - 6,098,339원, 4인 가구(II) - 6,837,999원, 4인 가구(III) - 7,277,228원임.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II)	4인 가구(III)
2014년 모형 이후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2021년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53,369	485,193	519,281	1,068,664	1,352,175	1,583,791	1,766,378	1,897,57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679	89,067	79,873	157,673	191,070	227,965	242,086	268,03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6,674	606,674	606,674	648,565	673,573	786,107	786,107	786,107
가정용품·가사서비스비	78,883	81,038	79,961	134,601	184,757	207,637	208,391	208,391
보건비	76,193	81,842	79,018	153,164	229,358	306,329	306,329	306,329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9,259	169,259	169,259	239,371	239,371	309,483	379,595	379,595
오락 및 문화비	160,535	156,928	158,732	261,640	254,522	243,181	222,618	226,225
교육비	61,870	61,870	61,870	61,870	285,742	686,916	947,368	1,109,089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7,347	97,739	77,543	165,480	203,317	223,618	237,497	237,669
11개비목 합계	2,127,829	2,055,130	2,091,480	3,559,159	4,292,296	5,316,828	5,907,290	6,257,190
조세공과금	240,578	230,862	235,720	493,690	586,934	781,511	930,709	1,020,038
총계	2,368,407	2,285,992	2,327,200	4,052,849	4,879,230	6,098,339	6,837,999	7,277,228

(전년 대비 증가율)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총계	1.3	1.0	1.2	1.6	2.5	1.3	1.3	-0.8

-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가구별 전체 평균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4인 가구(III)의 생계비가 감소한 부분은 조세공과금의 조정분이 반영된 결과임.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의 높은 지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비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6,674	606,674	606,674	648,565	673,573	786,107	786,107	786,107
보건비	76,193	81,842	79,018	153,164	229,358	306,329	306,329	306,329
교육비	61,870	61,870	61,870	61,870	285,742	686,916	947,368	1,109,089
주거보건교육 소계	744,737	750,386	747,562	863,599	1,188,673	1,779,352	2,039,804	2,201,525
주거보건교육 소계비율	31.4	32.8	32.1	21.3	24.4	29.2	29.8	30.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53,369	485,193	519,281	1,068,664	1,352,175	1,583,791	1,766,378	1,897,57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679	89,067	79,873	157,673	191,070	227,965	242,086	268,03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8,883	81,038	79,961	134,601	184,757	207,637	208,391	208,391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9,259	169,259	169,259	239,371	239,371	309,483	379,595	379,595
오락 및 문화비	160,535	156,928	158,732	261,640	254,522	243,181	222,618	226,225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7,347	97,739	77,543	165,480	203,317	223,618	237,497	237,669
조세공과금	240,578	230,862	235,720	493,690	586,934	781,511	930,709	1,020,038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	1,623,670	1,535,606	1,579,639	3,189,250	3,690,557	4,318,987	4,798,195	5,075,703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비율	68.6	67.2	67.9	78.7	75.6	70.8	70.2	69.7
2021년 표준생계비	2,368,407	2,285,992	2,327,200	4,052,849	4,879,230	6,098,339	6,837,999	7,277,228

-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별 지출 규모가 비교적 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단신 가구 32.1%, 2인 가구 21.3%, 3인 가구 24.4%, 4인 가구(I) 29.2%, 4인 가구(II) 29.8%, 4인 가구(III) 30.3%임.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단위 : %)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2017년	34.1	35.6	34.8	21.3	26.8	26.3	28.1	30.7
2018년	33.8	35.2	34.5	21.3	26.7	25.9	27.8	30.3
2019년	31.9	33.2	32.5	21.5	23.7	28.8	28.9	30.1
2020년	31.5	32.8	32.1	21.0	23.1	28.1	28.9	29.5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가 생계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합해지면 전체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가구당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함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차이)

2021년 생계비와 2020년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¹⁾ (단위 : 원)

생계비 비교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통계청 2020년 3/4분기 총소득(B)	2,734,533	3,535,115	5,237,724	6,300,429		
2021년 생계비 - B	-407,333	517,734	-358,494	-202,090	537,570	976,799

-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단신 가구 -407,333원, 2인 가구 +517,734원, 3인 가구 -358,494원, 4인 가구(I) -202,090원, 4인 가구(II) +537,570원, 4인 가구(III) +976,799원으로 나타남.

1) 통계청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노동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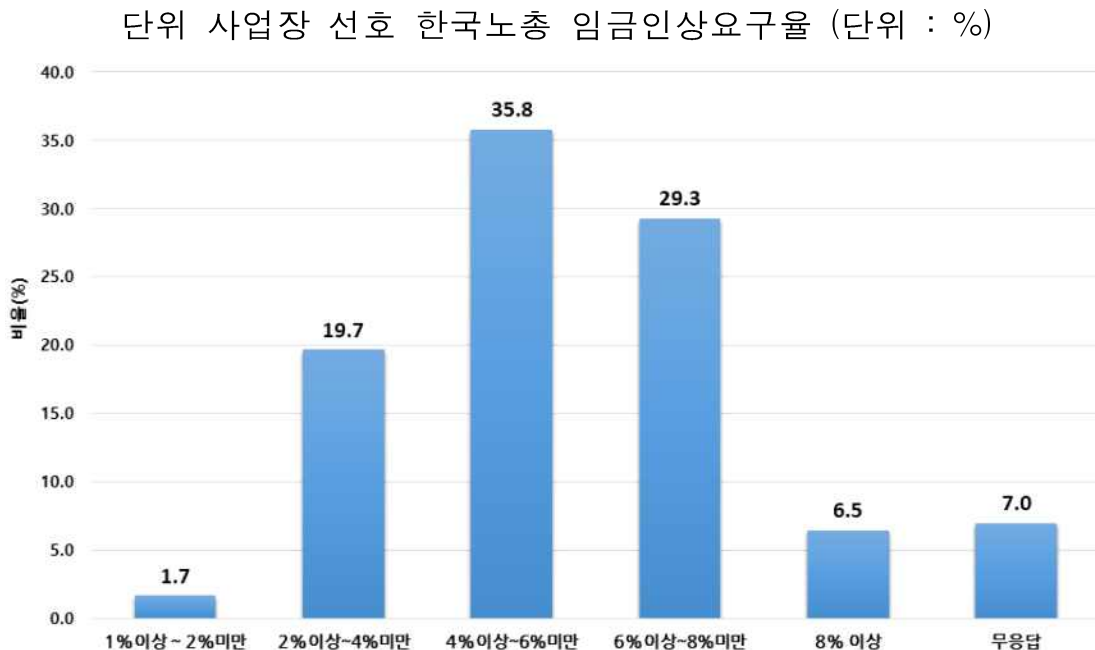
2. 조합 설문조사 결과

- 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 임단투 결과 및 평가와 2021년 임금인상 지표 등 지침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조사 기간 : 2020.12.17. ~ 2021.1.11.

*응답 단위노조 수 : 355개

(한국노총 제시 임금인상요구율 선호도)



-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올해 선호하는 임금인상요구율은 설문에 응답한 355개 노조 가운데 '4% 이상~6% 미만 인상(127개 노조, 35.8%)'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6% 이상~8% 미만 인상(104개 노조, 29.3%)', 2% 이상 ~ 4% 미만 인상(70개 노조, 19.7%)' 8% 이상 인상 (23개 노조, 6.5%)', 무응답(25개 노조, 7.0%) 순으로 나타남.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 및 타결률)

- 조사 결과 2020년 한국노총 단위노조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은 5.8%로 나타났으며, 실제 교섭 이후 임금인상 평균 타결률은 2.9%로 낮음. (응답 노조수 : 요구수준 - 267개, 타결수준 - 220개)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임금인상 요구액²⁾은 130,690원이었으며, 평균 타결액은 76,170원으로 조사됨

(2020년 교섭 기간)

2020년 평균 임금 교섭 기간

문항	응답 수 (개)	비 중 (%)
1개월 미만	39	11.0
1~2개월	89	25.1
3~4개월	103	29.0
5~6개월	48	13.5
6개월 이상	52	14.6
무응답	24	6.8
합 계	355	100.0

- 임단투 교섭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4개월(103개 노조, 29%)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2개월(89개 노조, 25.1%), 6개월 이상(52개, 14.6%)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의 50% 넘는 노조가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임금결정진도율의 경우(21년 현재 발표 시점, 1~11월 누계) 전체평균 57.2% 사업장에서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 협약임금인상률(21년 현재 11월 까지 발표)의 경우 전체평균 3.2%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2) 임금 교섭 현황의 기준임금은 기본급임.

(2021년 회원조합 임단투 중점사항)

2021년 임단투 중점사항 (단위: 개, 아래 괄호 %)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95 (27.3)	35 (10.2)	23 (6.8)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26 (7.5)	25 (7.3)	38 (11.2)
현장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0 (0)	3 (0.9)	9 (2.7)
비정규직 고용개선	8 (2.3)	11 (3.2)	5 (1.5)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14 (4.0)	31 (9.0)	47 (13.9)
임금체계 개선 대응	33 (9.5)	55 (16.0)	46 (13.6)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4 (1.1)	6 (1.7)	4 (1.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2 (3.4)	59 (17.2)	67 (19.8)
임금피크제 폐지	14 (4.0)	36 (10.5)	38 (11.2)
임금인상	142 (40.8)	82 (23.9)	62 (18.3)
합계	348 (100.0)	343 (100.0)	339 (100.0)

- 2021년 임단투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전체 348개 노조 중 '임금인상(142개 노조, 40.8%)'을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95개 노조, 27.3%)'로 나타남.
- 2순위 역시 '임금인상(82개 노조, 23.9%)'을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59개 노조, 17.2%)'로 조사됨.
- 3순위 역시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 안전보건(67개 노조, 19.8%) , '임금인상(62개 노조, 18.3%)'이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 결과적으로 올해 조합의 교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지부진 하였던 임금인상과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건강권을 가장 중점 사안으로 다룰 것 예상됨.

(2021년 한국노총 중점사항)

2021년 한국노총 중점사안 (단위: 개, 아래 괄호 %)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132 (38.2)	37 (10.8)	36 (10.5)
노동시간 단축대응	26 (7.5)	43 (12.5)	27 (7.9)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53 (15.3)	66 (19.2)	39 (11.4)
최저임금 인상	43 (12.4)	43 (12.5)	42 (12.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9 (2.6)	15 (4.4)	30 (8.7)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개선 등)	8 (2.3)	19 (5.5)	42 (12.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22 (6.4)	68 (19.8)	46 (13.4)
여성 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 평등 실현	1 (0.3)	4 (1.2)	5 (1.5)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대응	1 (0.3)	2 (0.6)	5 (1.5)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51 (14.7)	47 (13.7)	71 (20.7)
합계	346 (100.0)	344 (100.0)	343 (100.0)

- 2021년 한국노총 활동 최우선 사안 1순위로는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132개 노조, 15.3%)'를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53개 노조, 15.3%)'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68개 노조, 19.8%)' ,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66개 노조, 19.2%)' 순으로 나타남.
- 3순위는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71개 노조, 20.7%)'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46개 노조, 13.4%)'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올 해 현장 조합에서는 한국노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측의 구조조정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총고용 유지 정책과 더불어, 통상 임금 범위확대 대응방안, 노동자 건강권 등을 중점 사안으로 다뤄주길 기대함.

(2020년 임금교섭 특징 및 2021년 전망)

-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2020년 단위노조가 임금교섭시 제시한 요구율은 5.8%로 나타났으며 최종 타결수준은 2.9%로 나타났음.

* 2019년 단위노조 임금인상요구율 7.0%, 타결률 3.4%

	요구수준	타결수준
인상률	5.8%(△1.2%)	2.9%(△0.5%)
금액(기본급 기준)	130,690원	76,170원

* 응답 노조수 : 요구수준 - 267개, 타결수준 - 220개)

- 2020년 임금인상 요구수준과 타결수준이 낮아진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사업장 경영악화의 영향이 주요한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산업별 차이가 심하므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음.
- 2021년 단위노조 임금교섭의 경우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회복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교섭양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 원칙의 교섭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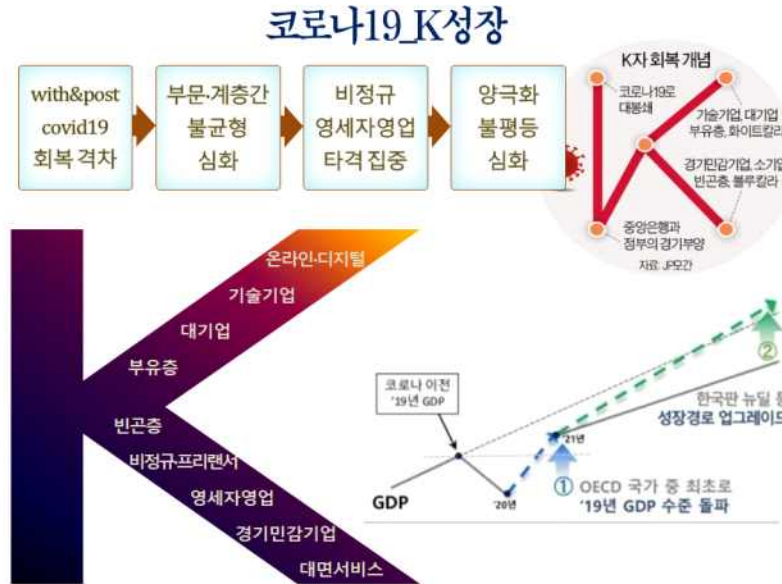
임금상승률과 노총 임금요구율의 비교 <단위: %>

구분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민주노총 임금요구율	경총임금 가이드라인	협약임금 인상률
2010	6.4	3.8	2.9	9.5	9.2	동결	-
2011	-0.9	-2.9	4.0	9.4	-	3.5	5.1
2012	5.3	2.0	2.2	9.1	9.3	2.9	4.7
2013	3.8	2.1	1.3	8.1	8.9	-	3.5
2014	2.4	1.1	1.3	8.1	8.0	2.3	4.1
2015	3.3	2.3	0.7	7.8	8.2	1.6	4.0
2016	3.8	2.8	1.0	7.9	7.4	동결	3.3
2017	2.7	1.3	1.9	7.6	7.4	동결	3.6
2018	5.7	4.3	1.4	9.2	7.1	2.0% 내외	4.2
2019	3.5	2.9	0.4	7.5	6.0		4.0
2020	0.1	-0.5	0.5	7.9 (5.3 - 임금인상분, 2.6 - 연대임금 조성분)	미발표	폐지	3.2

- 1) 2020년 명목임금, 실질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8월까지의 통계 발표치임
- 2) 협약임금인상률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잠정 추정치임 (노동부 임금 결정현황조사)

III.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 적극적인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만이 해답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금인상 정책이 도모돼야 함.
- 특히, 노동자 임금자제 및 삭감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닌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을 통한 노동자 가구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요구됨.
- 이와 같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미국의 경우 불평등 해소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배(7.25달러 → 15달러)가량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됨
-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표준생계비, 임단투 설문결과들을 결합한 전통적 임금인상 방식(4.2%)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임금 인상분(2.6%)을 결합한 6.8% 임금인상요구율**을 발표하는 바임 (연대임금 관련 내용 18페이지 참조)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및 산출 근거>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6.8%

● 산출근거

노동자 임금인상분 (4.2%)

[’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2%) +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0%)]

+

연대임금조성분 (2.6%)

[전체 임금인상요구율의 1/3수준]

1. 임금인상 요구율 기본 산출방식

-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률을 산출하는 근거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2%),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0%)과 최근 3년간 (2017년~2019년) 협약임금 평균인상률 (3.9%)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특히, 현재 전체 소득가운데 노동자 가구의 재산소득은 극히 희박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6%를 달하는 구조에서 여전히 노동자 임금 구조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정책이 마련돼야 함.
- 노동자 가구원 3.14인의 생계를 근로소득으로만 충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계비와 근로소득의 격차는 17%임. 한국노총은 이를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년 생계비 충족률을 높이는 것을 임금인상 요구 목표로 제시하였음.

1) 임금인상 요구율 세부 산출근거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원)
(1) 노동자 가구원 수 3.14인 생계비 ¹⁾		5,049,905
(2)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6%) ²⁾		4,342,919
(3) 2021년 물가상승률(1.0%)을 반영한 생계비 ³⁾		4,386,348
(4) 2020년 월평균임금 (2020년 1월 ~ 11월 평균)	월 고정임금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748,537
	정액임금	3,243,346
(5) 생계비와 실질임금과의 차액 (17.0% 부족)	생계비-월 고정임금	637,811
	생계비-월 정액임금	551,853
(6)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6.8%
(7) 월임금 획득 목표 (6.8%)	월 고정임금 기준	4,004,736
	월 정액임금 기준	3,480,197
(8) 임금요구 금액 (6.8%)	월 고정임금 기준	256,199
	월 정액임금 기준	221,671

출처:

- 1) 노동자 가구원 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2020년 3/4분기)
- 2) 전체 소득 중 노동소득 차지비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3) 물가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년 11월)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 평균(2020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4인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노동자가구는 4인 가구(I)이므로 실제 평균노동자 가구규모(인)에 맞추어 생계비 조정
- ▶ 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수 3.14인을 고려한 생계비 : 5,049,905원
 $- 5,049,905\text{원} = 3\text{인 가구 생계비}(4,879,230\text{원}) + \{[4\text{인 가구 생계비}(6,098,339\text{원}) - 3\text{인 가구 생계비}(4,879,230\text{원})] \times 0.14\}$
- ▶ 통계청, 2020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전체 평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6%
-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5,049,905\text{원} \times 86\% = 4,342,919\text{원}$

○ 2021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 ▶ 2021년 물가상승률³⁾ 1.0% 반영
- ▶ $4,342,919\text{원} + (4,342,919\text{원} \times 1.0\%) = 4,386,348\text{원}$

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11)

생계비 충족률

생계비 획득목표	월 고정임금			월정액임금(상여제외)		
	목표액	차액	인상률	목표액	차액	인상률
100.0%	4,386,348	637,811	17.0	3,795,199	551,853	17.0
99.0%	4,342,485	593,948	15.8	3,757,247	513,901	15.8
98.0%	4,298,621	550,084	14.7	3,719,295	475,949	14.7
97.0%	4,254,758	506,221	13.5	3,681,343	437,997	13.5
96.0%	4,210,894	462,357	12.3	3,643,391	400,045	12.3
95.0%	4,167,031	418,494	11.2	3,605,439	362,093	11.2
94.0%	4,123,167	374,630	10.0	3,567,487	324,141	10.0
93.0%	4,079,304	330,767	8.8	3,529,535	286,189	8.8
92.0%	4,035,440	286,903	7.7	3,491,583	248,237	7.7
91.3%	4,004,736	256,199	6.8	3,480,197	221,671	6.8
88.0%	3,859,986	111,449	3.0	3,415,679	96,429	3.0
87.0%	3,816,123	67,586	1.8	3,377,727	58,477	1.8
86.0%	3,772,259	23,722	0.6	3,339,775	20,525	0.6

cf. 최근 3년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의 생계비 충족률
2019년 - 90.3% 2020년 - 90.7% 2021년 - 91.3%

- 2018년 표준생계비의 모형이 부분 개정돼 기존 생계비 모형과 시계열 비교는 어렵지만, 2021년 임금인상분은 생계비 충족률 91.3% 수준으로 나타남.

○ 월 고정임금 총액과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 획득 목표

	월고정임금총액	정액급여	상여월할분	상여금 비중
평균(원)	3,748,537	3,243,346	505,191	13.5%
획득목표(100%)	4,386,348	3,795,199	591,149	13.5%
차액(원)	637,811	551,853	85,958	-
인상률(%)	17.0%	17.0%	17.0%	-

주 : 월 고정임금 총액은 2020년 1월 ~ 10월 임금 누계 평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2) 연대임금 인상요구

○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전략

- 노총은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간, 원청-하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접근을 시도해왔으나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음.
- 이는 직접 대기업-원청-정규직 임금인상을 중단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기초한 방안이기에 현장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임.
-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의 현실로부터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 노동계급내 연대 강화를 위한 시도의 측면에서 노총은 연대임금전략을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계속 추진할 예정.

○ 연대임금제도 실행 방안

- 연대임금인상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계급 내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사업장단위의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그 시야를 '내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사업장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업종과 지역이라는 전체 산업생태계 공동의 발전과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연대임금실천전략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장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함.
- 지역사회 내 대기업(or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모두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기본재산 출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분과 결합하여 기금조성에 기여

하는 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 따라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6.8%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현장의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을 공동근로복지기금 구성에 관한 노사분담을 전제로 분담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예

- 1) 지역별 동일업종의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임금인상요구안을 6.8%로 제시.
- 2) 6.8%의 임금요구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분에 해당하는 2.2~2.8%(1/3 수준) 정도를 노동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
- 3)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 다양한 협력업체들을 공동기금으로 묶고, 복지사업을 통해 노동자 공동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시행. 이 과정에서 노사자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진행

- 더불어 단순히 원청이 하청을 품는 방식의 초기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떠나 2030년까지 원하청 평등한 지위로서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산별과 지역을 통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더욱 발전시켜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 주도의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야 함.

한국노총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발전 단계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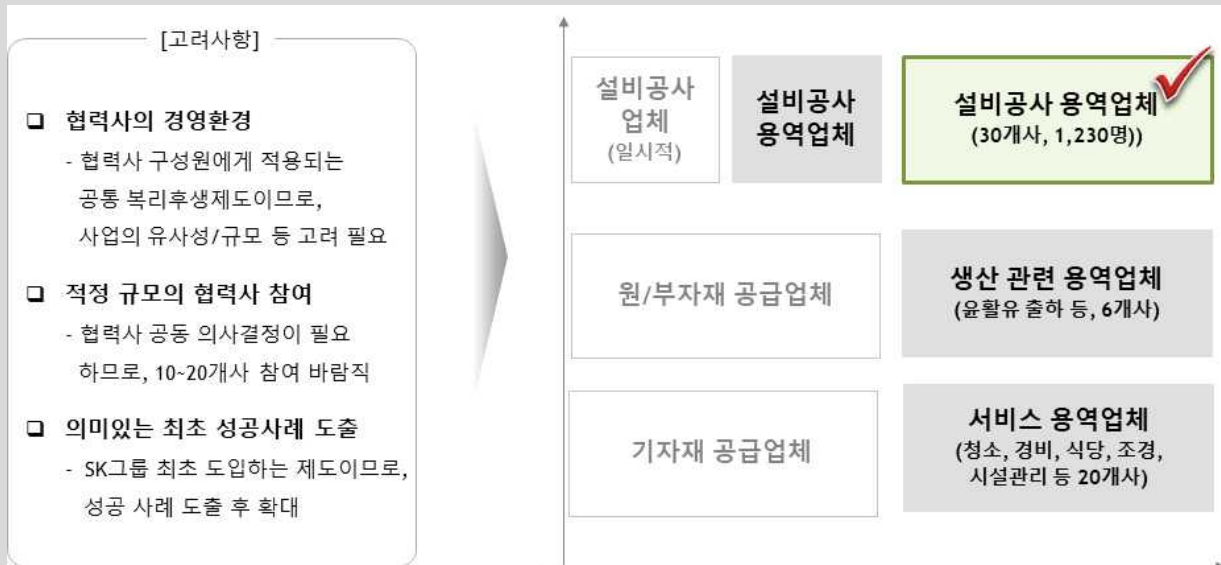
사례① - [2단계: S화학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시]

- 노동조합에서 공격적으로 제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최근 설치한 사례. 2019년 7월 29일 단체협약에 조인, 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합의. 대기업 원청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또한 생산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양보, 임직원 모두 기본금 1% 출연하고 회사가 결합하여 자금을 출연. 협력사에서 도 추가 출연하고 정부자금 지원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SK 출연, 정부 지원, 협력사 출연의 3자 Matching을 통해 자원 조달



ㄷ



사례② - [3단계: K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시]

- K산업은 항공 및 우주산업기업으로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례. 초창기에는 중소기업 20개가 참여하여 4억, 중소기업체가 4억, 근로복지공단이 4억 총 12억으로 공동기금출발.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취지 및 자지단체의 역할을 인식한 경남도청에서 지자체 최초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함. 2020년 6월 경남도 및 협력업체 소재 4개 시가 공동으로 6억원을 출연, K산업에서 5억원, 20개 협력업체에서 5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매칭자금으로 국비 16억원 출연. 이를 통해 20개사 1778명의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명절휴가비, 학자금 등으로 1인당 170만원 가량을 지원하게 됨. 더불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인당 2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곧바로 시행함.

사례③ -[4단계: 연대임금전략에 기반한 금융노조의 단협 예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별노조로서 단체교섭의 전략으로서 사회연대임금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 지난해 9월 금융노조는 ‘2020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및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회연대임금전략을 단체교섭으로 구현한 최초의 사례를 보여주었음. 주요내용으로 2020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의 1.8% 기준으로 하되, “노사는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임금인상분 중 0.9%를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임금인상분 중 0.9%를 반납하여 동 금액을 용역,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즉,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으로 활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며, 총액으로는 약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합의와 관련하여 ‘회의록 기재사항’으로 “연대임금 기부와 관련하여 0.4%는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에, 0.5%는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기로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지부노사가 정하기로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명기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금융인공제회 설립과 연계하여 공동복지 플랫폼을 추진”한다든가 “보육시설 설치에 관해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복지확대전략을 단체교섭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3)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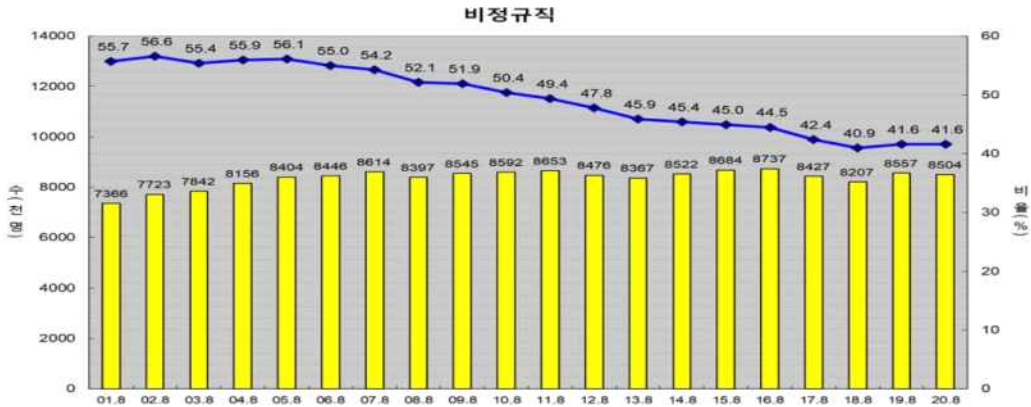
○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 불평등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변화

구분	2018.8	2019.8(A)	2020.8(B)	증감 규모(B-A)
정규직	1,184만 명 (59.1%)	1,200만 명 (58.4%)	1,194만 명 (58.4%)	△6만
비정규직	821만 명 (40.9%)	856만 명 (41.6%)	850만 명 (41.6%)	△6만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 변화 추이>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는 2020년 8월 기준 850만 명(임금노동자의 41.6%)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소폭 증가하였지만 2020년은 감소세로 들어섬.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임금의 경우, 2020년 171만 원에서 2만 원(1.0%)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 비율은 51.8%에서 51.5%로 전년보다 0.3%p 확대됨.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불평등 및 노동시간 추이

구 분		2018.8.	2019.8.	2019.8.
임 금	정 규 직	100	100	100
	비정규직	50.7%	51.8%	51.5%
노동 시간	정 규 직	43.0시간	42.9시간	42.5시간
	비정규직	36.7시간	35.3시간	34.2시간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시간의 경우 2020년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4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9시간 줄어들어 감소 추세를 이어나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불어 사업장의 임단협에 의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함.
- 현실적으로 일거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 접근
-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보호 활동의 기대효과
 - ▶ 사업장 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 ▶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 ▶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 ▶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

○ 사업장 수준 임금 하한선 설정

- 요지 :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 내 임금 하한선 설정
- 임금협약 예시

제○조 (사내 임금 하한선의 결정)

1.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 하한선을 결정한다.
2.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도급, 용역, 파견 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

(1) 2021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

< 임금소득 불평등도와 저임금계층의 분포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 (배)	4.36	4.35	4.13	3.75	3.59	3.64
저임금계층 비율 (%)	24.5	22.6	21.5	15.7	15.8	17.4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임금소득불평등도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추세는 긍정적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OECD 기준 등 세계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불평등도는 매우 높은 편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완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2021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 ▶ 2021년 월 고정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256,199원을 비정규직의 임금 요구액으로 제시함
- 산출근거
 - ▶ 비정규직 임금 173만 원(정규직 대비 51.5%)
 - ▶ 2021년도 한국노총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256,199원
- 인상 효과
 -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이 관철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
 - ▶ 비정규직 현재 임금 1,730,000원(51.5%)에서 256,199원을 확보하는 경우, 1,986,199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54.7%로 낮아지게됨

비정규직 임금인상 기대효과 (단위 : 원, %)

	현 행	임금인상확보시
정 규 직(A) (원)	3,360,000	3,616,199
비정규직(B) (원)	1,730,000	1,986,199
비정규직임금비율(B/A) (%)	51.5	54.7

4) 2022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양대노총 협의 및 3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논의를 거쳐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구 분	시 간 급(원)	일 급(원)	인 상 륜(%)
97.9-98.8	1,485	11,880	6.1
98.9-99.8	1,525	12,200	2.7
99.9-00.8	1,600	12,800	4.9
00.9-01.8	1,865	14,920	16.5
01.9-02.8	2,100	16,800	12.6
02.9-03.8	2,275	18,200	8.3
03.9-04.8	2,510	20,080	10.3
04.9-05.8	2,840	22,720	13.1
05.9-06.12	3,100	24,800	9.2
07.1-07.12	3,480	27,840	12.3
08.1-08.12	3,770	30,160	8.3
09.1-09.12	4,000	32,000	6.1
10.1-10.12	4,110	32,880	2.75
11.1-11.12	4,320	34,560	5.1
12.1-12.12	4,580	36,640	6.0
13.1-13.12	4,860	38,880	6.1
14.1-14.12	5,210	41,680	7.2
15.1-15.12	5,580	44,640	7.1
16.1-16.12	6,030	48,240	8.1
17.1-17.12	6,470	51,760	7.3
18.1-18.12	7,530	60,240	16.4
19.1-19.12	8,350	66,800	10.9
20.1-20.12	8,590	68,720	2.87
21.1-21.12	8,720	69,760	1.5